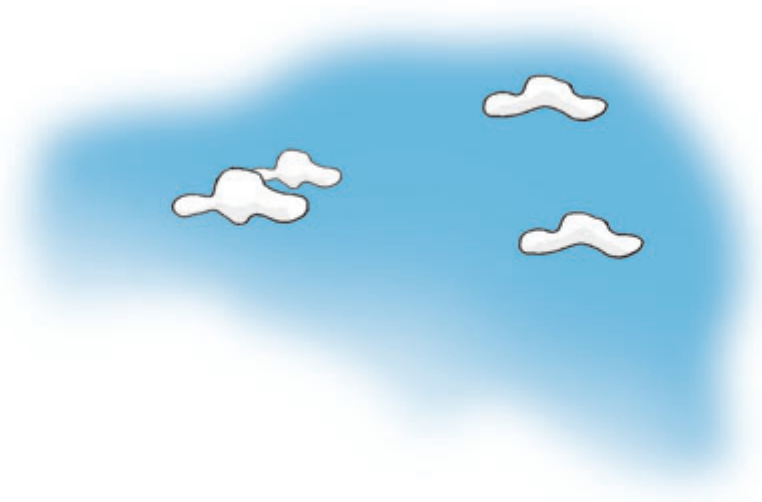


전력산업구조개편

‘아하, 그렇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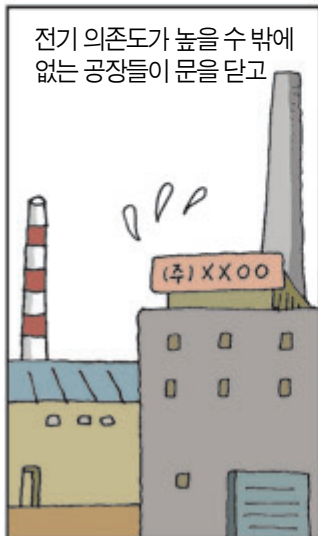


목 차

프롤로그	4
1. 무엇이 달라졌나	9
2. 어떻게	15
3. 요금	21
4. 안정공급	26
5. 민영화	32
에필로그	37

프롤로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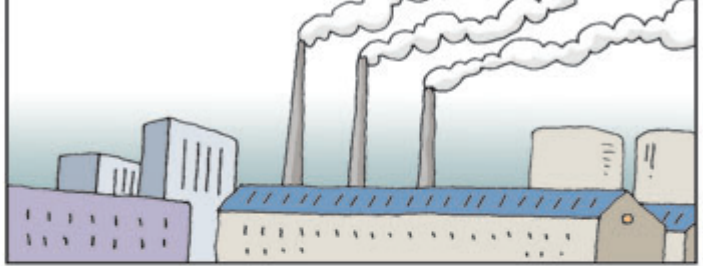




이렇게 우리의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나라의 경제활동에 있어 한시도 없으면 안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전기입니다.



이토록 중요한 전기를
생산, 판매하는
전력산업을



민영화 한다니
말이 됩니까?

맞아요!



민간기업의 목적이
뭐겠어요?
오직 하나
이윤 추구잖아요.



그런데 전기처럼
모두가 써야 하는
공공재이고



나라경제의 근간이 되는
분야를 민간에게 맡긴다니
정말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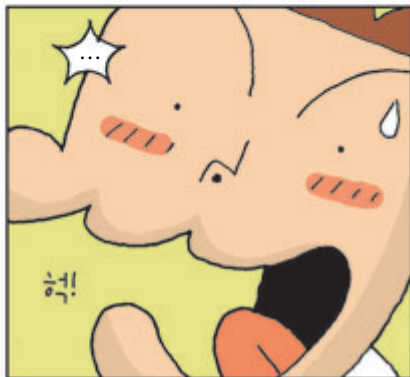
걱정된다! 걱정돼!

웅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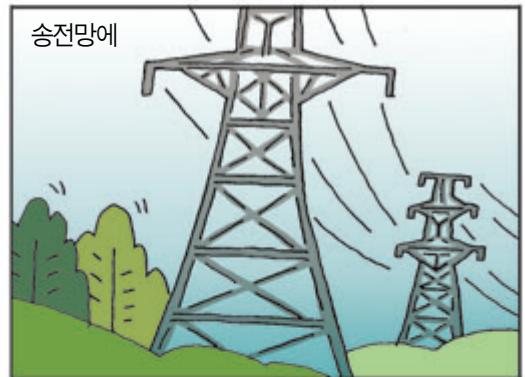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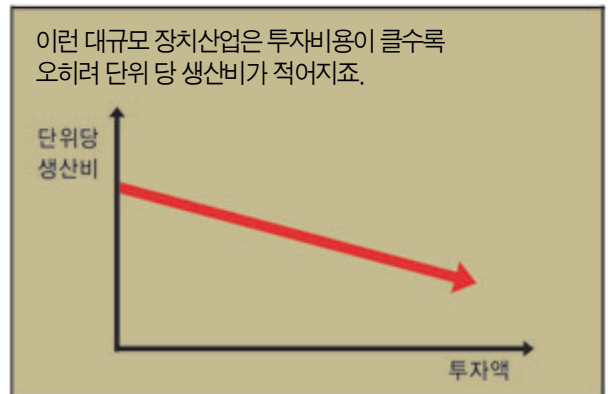
웅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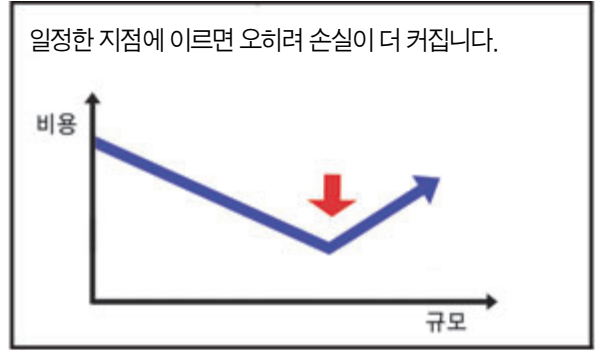


1. 무엇이 달라졌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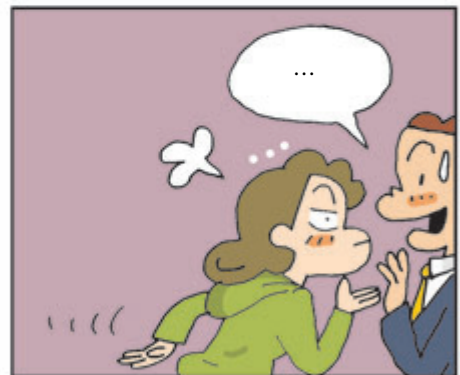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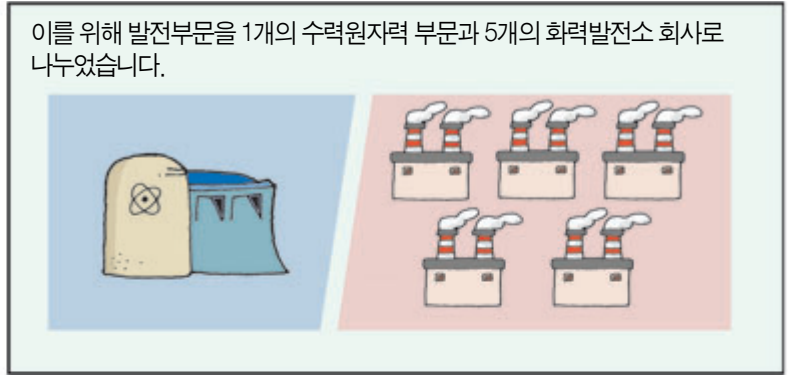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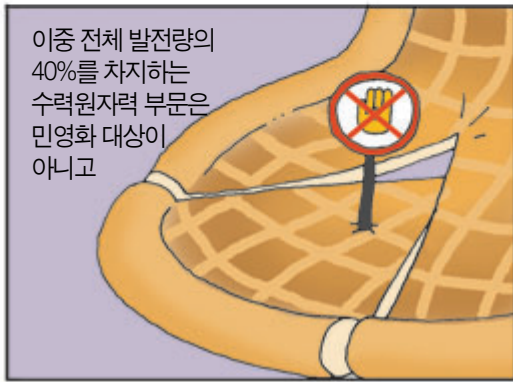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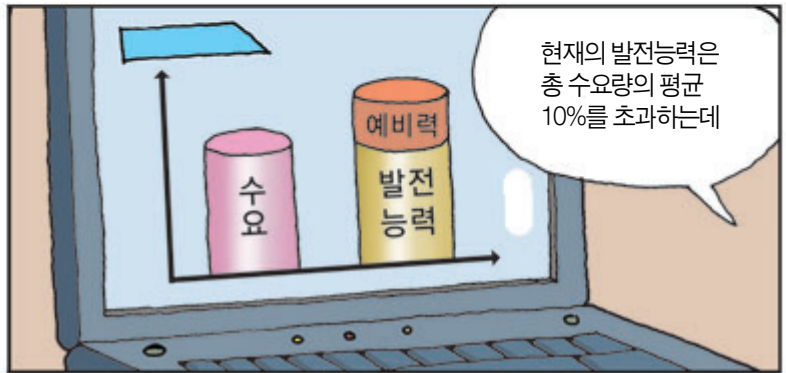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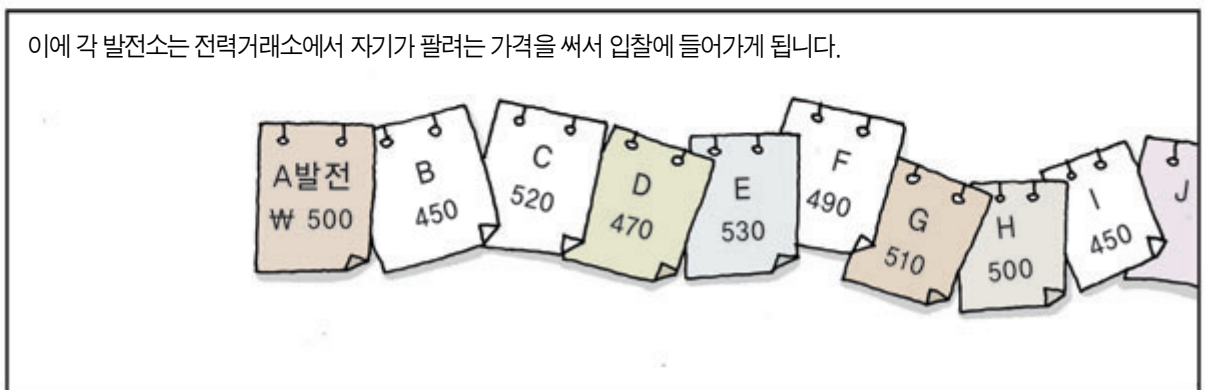




2. 어떻게







그러면 가장 비싼 가격을 써낸 1개의 발전소는 제외됩니다.



즉 다음날 발전소를 돌릴 수가 없는거죠.



그러니까 각 발전소들은 더욱 더 원가절감을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죠.

딩동댕
정답입니다!



발전경쟁으로 인해 6개 발전 회사들이 분할 첫해인 2001년에 경비절감을 통해 약 2000억원의 경영성과를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0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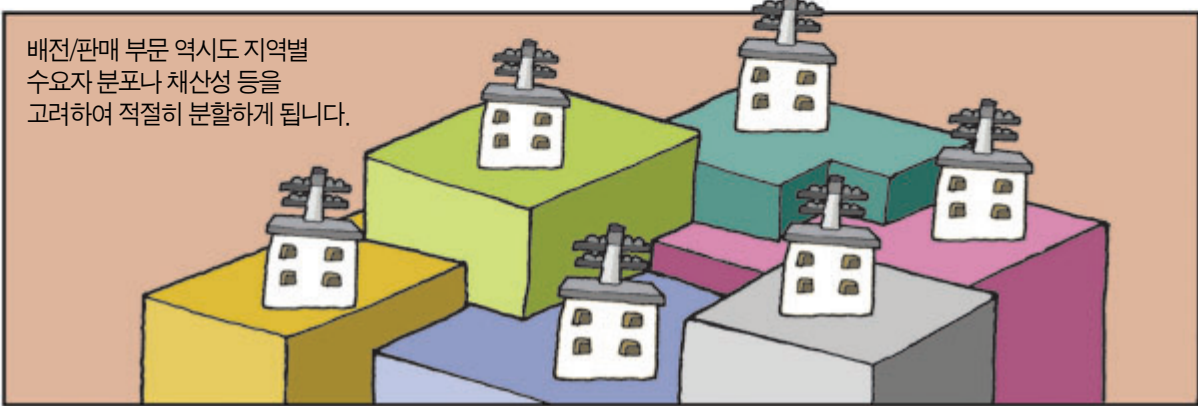
이렇게 경쟁에 적응된 발전 회사들을 단계적으로 민영화 시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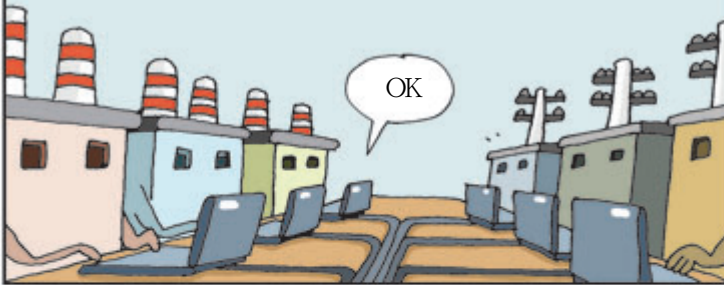
이어 배전/판매회사를 분할하는 2단계인 도매경쟁 단계로 넘어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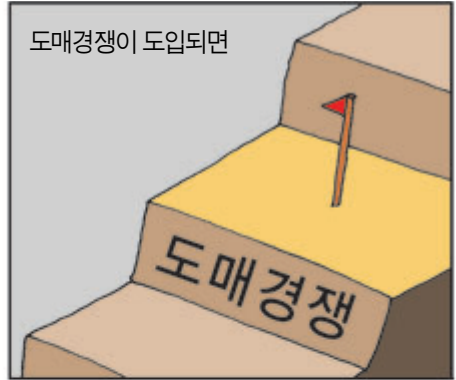
배전/판매 부문 역시도 지역별 수요자 분포나 채산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분할하게 됩니다.



배전/판매 회사들은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회사들과 양방향 입찰제도를 통해 전력을 구매합니다.



도매경쟁이 도입되면



전력시장에 다수의 공급자와 소비자가 있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조절되게 되므로



실질 경쟁을 통해 소비자는 더 싸고 질 좋은 전력을 공급 받게 됩니다.



큰 공장 같은 대형 소비자들은 시장에서 직접구입이 가능해지므로 전력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회장님
저희 회사 전기를
써 주세요.

저희 회사
전기는 말이죠...



다음으로 민영화의 3단계인 소매경쟁단계로 들어섭니다.



이때가 되면 일반 소비자들이 직접 전력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전력상품을
선택한다고요?





어쩌면 이렇게 될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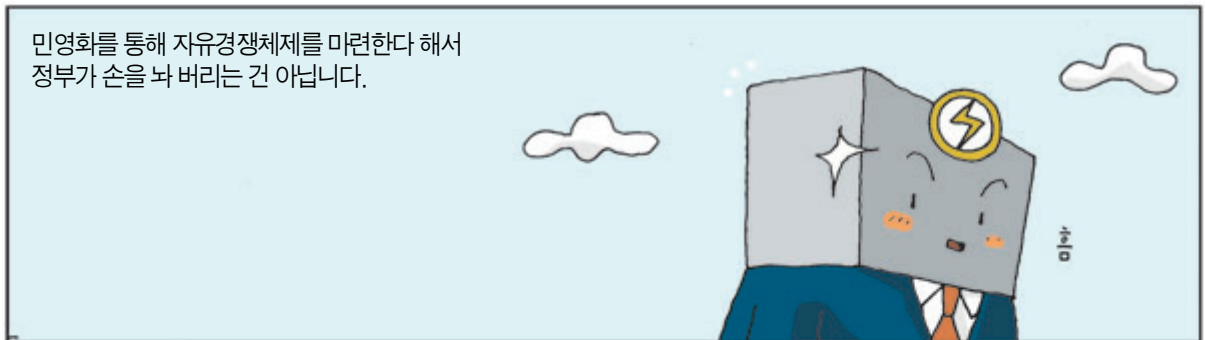
이번 특별 행사기간에
저희 전기를 찾아주신
고객님들께는 특별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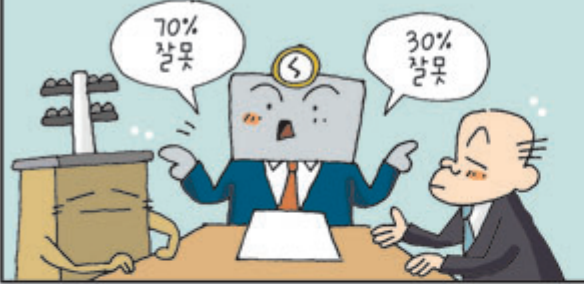
3. 요금







사업자간 또는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분쟁 조정 및
판정 기능



공익 보호나 위반행위 조사기능 등을 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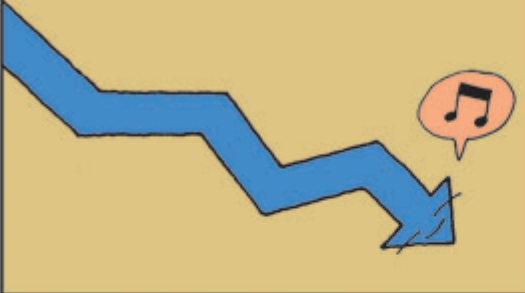
적어도 앞서 우려하신 것처럼
발전 사업자들이 멋대로
요금을 올리거나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설비투자의 합리화,
발전원가 절감 등으로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영국이나 호주 빅토리아주 등 민영화를 앞서 진행했던
나라들의 사례를 봐도 그렇습니다.



미국의 경우 구조개편을 실시한 주와 실시하지 않은 주의
전기요금을 분석하여보면, 경쟁을 실시한 주의 전기요금이
훨씬 싸고, 그로 인해 주택용 요금이 상업용, 산업용보다
더 많이 인하됨으로 구조개편의 효과가 일반국민에게
더 많이 돌아갔다고
미국시민단체 보고서(PennFuture)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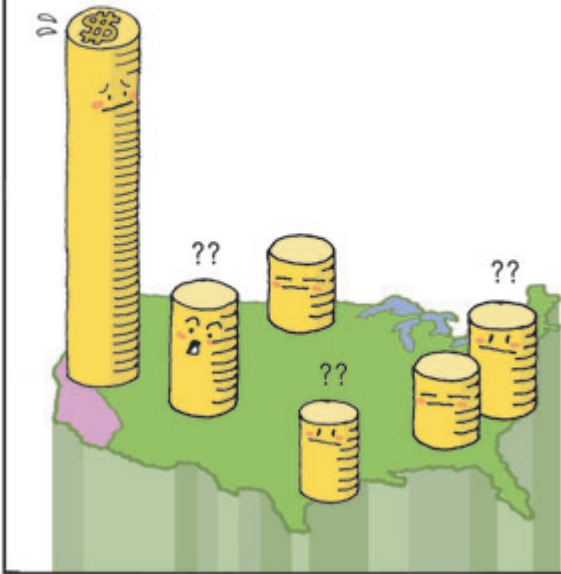
4. 안정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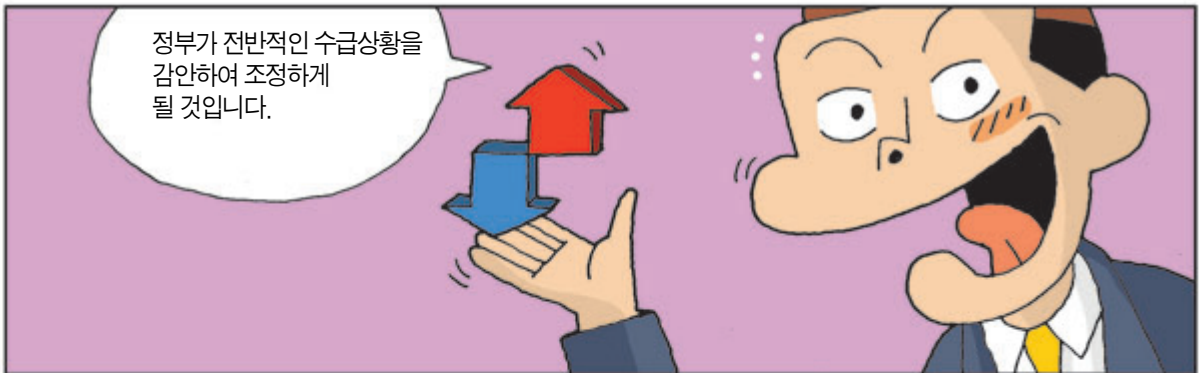
참고로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여러 주에서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나,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나머지 주에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걸 보면 이 실패는 구조개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캘리포니아의 정책적 문제입니다.



우선, 현재 건설중인 발전소들로 2006년까지는 안정적 수급이 가능합니다.



2007년 이후에도 전력수요의 안정적 성장, 발전사업 신규진입의 자유 등에 의해 민간의 발전소 건설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발전사업자와 판매 사업자간에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토록 유도해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줄이게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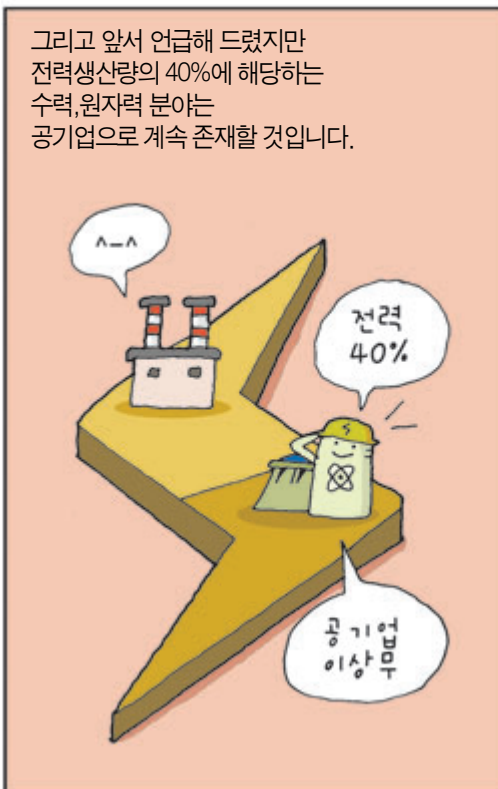
예비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별도의 시장을 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기 사업법에 전기공급의 의무를 규정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전력중단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해 드렸지만 전력생산량의 40%에 해당하는 수력,원자력 분야는 공기업으로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안정적 전력공급에 대해 더 의심 있으세요?

누가 의심있대요? 그냥 아나 물어본 거지.

하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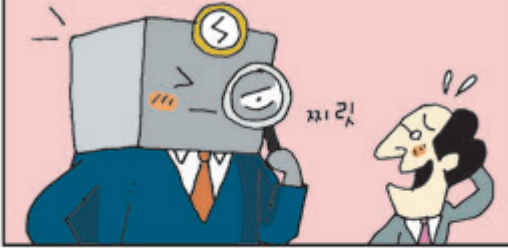
천하의 똑순이도 못 당하는 사람이 있네 그려.



5. 민영화



규제기관의 엄격한 감독하에 기업운영을 하게 되니까



비정상적인 이윤취득 가능성도 매우 낮아 국부유출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외국의 첨단 기술 및 선진경영기법이 도입됨으로써



국부창출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전력을 외국인 손에 맡긴다는게 영...

5개 발전회사를 외국기업이 다 인수할 수도 있잖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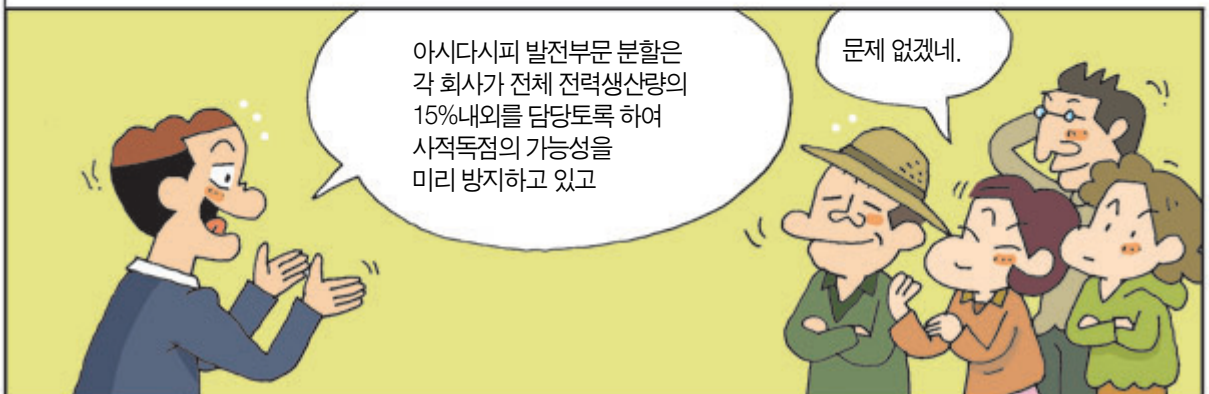


그렇지 않습니다. 경영권 매각시 외국인의 소유 한도는 국내 총 발전설비의 3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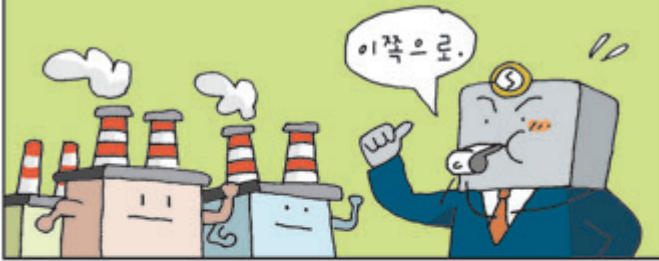
아 그렇군요.







규제기관인 전기위원회가 시장을 감독하면서 전력시장을 경쟁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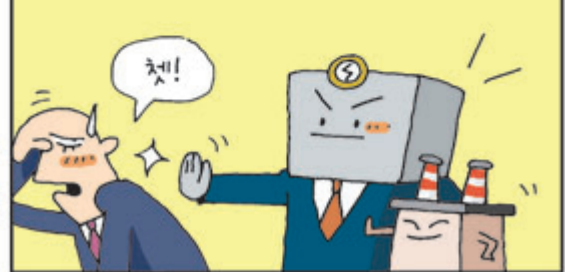
그렇더라도 경쟁에 따라 성장하는 회사가 있고 무너지는 회사가 있을텐데요.



그럴 경우라도 회사의 분할이나 합병은 산자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공정경쟁을 해치는 인수·합병은 하기 어려울 겁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정도로 정리하죠. 어떻게 오해와 걱정은 많이 풀렸습니까?

네



에필로그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

Korea Electricity Commission

<http://www.korec.go.kr>